

시내버스 운임 효율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안

의 안 번 호	108
------------	-----

제안년월일 : 2003. 7. 3.

제 안 자 : 경제건설위원회

1. 주 문

가. 시내버스 운임 효율조정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 및 지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검증용역에 의해 일방적으로 요금이 결정되므로서, 이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나.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의 참여가 배제된 획일적인 시내버스 요금조정 체계는 결국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발전을 방해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 의회가 앞장서서 이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

2. 제안이유

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요금 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운임 요금의 기준 및 효율의 결정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운송업체가 시·도시사가 결정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통지하도록 규정되므로서 시장·군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사항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음.

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중산·서민층으로 각 지역마다 운행여건 및 버스업체의 경영실태가 다른데도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문제가 있어 이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함.

시내버스 운임 효율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문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어느 때 보다 시민의 참여의식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실수요자인 해당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반발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요금의 기준 및 효율의 결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규칙에 운송업체가 시·도지사가 결정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장·군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사항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항에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뜻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시내버스 요금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조속히 재위임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3년 7월 11일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